광남일보

조간 제8150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음력 7월 7일)

"하루 남았다"…통합시민들 "양 대학 의대 결단하라"

〈목포대·순천대〉

국립의대 계획서 제출 시한 임박…단일안 사실상 무산

의대·병원 동시 고집 평행선…지역 이기주의 시민 피해

시민들, 막판 합의 촉구…대학별 신청 등 절충안 모색

전남·광주의 30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벼랑 끝에 섰다. 정부가 요구한 추진계획서 제출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는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를 놓고 끝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8면

두 대학은 공동계획서 대신 각자 작성한 의대 신설 관련 자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의대 신설의 필요성과 신청 정원 등 일부 내용만 담길 뿐 의대 운영과 교육시설, 교육병원, 교원 확보 방안 등 대학 간 합의가 필요한 핵심 항목은 빠졌다. 정부가 요구한 통합계획서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국립의대 신설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18일 전남광주특별시와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특별시는 정부에 제출할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두 대학에 이날까지 관련 자료를 내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전남광주특별시와 두 대학에 통합을 전제로 한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하나의 의과대학과 하나의 대학병원을 설립한다는 원칙 아래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를 합의하고 교육시설과 교육병원, 교원 확보 방안 등을 공동으로 마련하라는 요구다.

당초 두 대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0쪽 안팎의 통합의대 계획서를 완성해야 했다. 하지만 각각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는 의대 신설 필요성과 당위성, 신청 정원,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 등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일부 항목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대학은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의대와 대학병원, 대학본부 위치를 놓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지난 14일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두 대학 총장이 3자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제출 시한을 앞두고 추가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두 대학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오는 20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동시에 목포대와 순천대가 각각 의대 신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학별 단독 신청을 허용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두 대학의 계획을 심사해 한 곳을 직접 선정하거나 전남광주특별시에 대학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안은 대학 통합과 공동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내세운 정부의 당초 원칙과 배치될 수 있다. 교육부가 대학별 단독 신청이나 지자체의 대학 선정 권한을 받아들일지도 불확실하다. 대학 간 합의가 빠진 계획서가 보완이나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국립의대 신설 일정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경북과의 정원 경쟁이다. 정부는 2030학년도 신설 국립의대 정원 100명의 배정 후보지로 전남광주와 경북을 선정했다.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중심으로 의학교육과 대학병원 설립·운영 방안을 구체화한 단일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광주가 대학별 입장과 일부 항목만 담긴 계획서를 제출하고 경북이 완결된 계획서를 내면 정부 평가에서 전남광주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두 대학이 의대와 대학병원을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사이 정원 100명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갈등의 핵심은 의대와 대학병원의 위치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두 시설의 기능을 동·서부권에 분산하거나 학년별 교육 기능을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목포대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순천대는 의대와 대학병원 모두 동부권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순천대는 동부권 인구가 약 84만명에 이르고 여수·광양국가산단과 여수광양항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해 중증·응급환자와 산업재해 의료수요가 높다는 점을 내세운다. 목포대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구와 수익성보다 의료취약도와 공공의료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최고위원들과 함께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김민석 신임 대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지원"

민주 새 지도부 5·18 민주묘지 참배…"이동대표실도 구상 중"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꾸려진 지도부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8면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 등 신임 지도부는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민석 대표는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오월정신을 발전시켜 대한민국 메가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고 적었다.

이후 김 대표 등 신임 지도부는 민주의문 앞에서 집결한 뒤 공동 헌화와 분향을 통해 오월 영령들의 뜻을 기렸다.

김 대표는 참배 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저와 민형배 시장, 이재명 정부 전체는 한걸음도 허투루 걸을 수 없는 완벽한 운명 공동체"라며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과 지역의 오래된 많은 현안을 조율해 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특별시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도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 잘 조율하고, 협력하는 취지를 살리고 마련한 것이다"며 "2~3주는 전남광주를 방문하겠다. 당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특별시 지자체 11곳 '의료 취약지'

곡성·구례·고흥 등 1시간 내 종합병원 이용 어려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 중 11곳이 1시간 내 종합병원 이용이 힘든 '의료 취약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접근이 힘든 응급 의료취약지는 15곳으로 파악됐다.

18일 국립중앙의료원의 '2025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77곳(30.8%)이 의료 취약지로 분류됐다.

종합병원 60분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과 60분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을 표준화해 평균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의료취약지로 평가됐다.

시도별로 취약지 분포를 보면 강원의 취약지 비율이 66.7%(18곳 중 23곳)로 가장 높았다. 경북(56.5%·23곳 중 13곳), 경남(54.5%·22곳 중 12곳), 제주(50%·2곳 중 서귀포), 전남(50%·22곳 중 11곳)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는 취약지가 1곳도 없었다.

전남의 경우 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영암·완도·진도·신안군 등 11개 지자체가 의료취약지로 확인됐다. 특히 '응급의료 취약지'는 전국 102곳에 달했으며 전남지역 15곳이 포함됐다.

응급의료취약지는 1시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30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접근이 어려운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전남지역 응급의료 취약지로는 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군 등 15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분만 의료에 대한 접근성 취약도, 의료이용 취약도를 분석해 108곳을 분만 의료 취약지로 분류했다. 이후 접근성과 의료이용이 모두 취약하면 A등급, 둘 중 하나만 취약하면 B등급으로 구분했다.

A·B등급은 아니지만 인구,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지역을 C등급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A등급은 32곳, B등급(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지역 제외) 21곳, C등급 55곳이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